

##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평

이동춘 (장신대학교 초빙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공공신학 이해

### III.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 IV. 남한 정부의 이전 통일정책들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비교

1. 이전 정부들의 통일정책
2. 이전 정부들의 통일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비교

### V.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1.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2.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북한의 행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반응 및 대응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 VI.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발전적 제안하기

1. 에큐메니칼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받아들여라
2. ‘신뢰는 쌓여진 대화만큼 쌓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 VII. 나가는 말

---

• ABSTRACT •

---

## A christian ethical criticism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policies of Park Geun-hye regime

Lee, Dong-Chun

This article is focusing a christian ethical criticism on unification policies of Park Geun-hye regime. However, I think, it is too early time that is critics about unification policies of Park Geun-hye regime because of on a point in time only 4 months that departure of Park Geun-hye regime. In spite of, this article has a dream that 'the Korean peninsula trust(credit) process' of Park Geun-hye regime comes true. So this was able to criticise 'the Korean peninsula trust(credit) process' of Park Geun-hye regime. But hers has to forget the fact that confronts various issues in the unification polities.

In studies,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needs stances of long endurance and ecumenical communication. In fact, since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policies and philosophy is abstract and ideal, concrete contents attach in it, but a long endurance and ecumenical communication will look to 'the Korean peninsula trust(credit) process' in along term. A premise of everything is a communication. Therefore, it is that needs to develop communications of various method. It needs that are not only strategical communication but brotherly affectional communication.

But the problems' solution is not to be endeavor of south Korea. It is that must endeavor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if a endeavor of south Korea has govern the problems' solutions, does it come across as presumptuous? In a viewpoint of Jesus' serving, a serving means to happily undergo inconvenience and to lay down pride. In that case, in a stance of christian ethics it is right that endeavors more the south Korea than the north Korea. If unification policies of Park Geun-hye regime are like trust(credit) as accumulating process, it is right that endeavors and yields the south Korea more than the

---

north Korea. This attitudes will be roll a key that solves difficult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However it is that is more important idea than this proposal. It is the fact that the faith that possi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is always is in our faith. Therefore, through trust(credit)-accumulation through various communications and accumulating trust(credit) through accumulated communications, a public theology suggests the faith that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dvances.

For this, it work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unification polities of other regimes, and through this work, looked carefully a realistic appropriateness and theological compatibility. And lastly, in a stance of christian ethics, this article suggested theological in a view of public theology for a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credit) process' of Park Geun-hye regime.

**Key words:** unification policies, the Korean peninsula trust(credit) process, public theology, ecumenical communication, serving

---

## I. 들어가는 말

2013년 2월 25일 0시를 기해 들어선 새로운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다양한 사안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전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결의안 2094호 통과, 이에 맞서 연일 높은 수위의 위협을 내놓고 있는 북한,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의 가속화, 독도영유권을 놓고 벌이는 한일간 긴장의 고조, 아태 지역을 향한 러시아의 과감한 움직임,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5년간의 남북대화 단절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열망<sup>1)</sup> 등이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사안들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사안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새로운 정부의 통일정책에 기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1년 전 “한반도는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sup>2)</sup>에 서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다. 즉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 체제가 1년쯤 된 시점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 역시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된 시점이기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은 박근혜 정부가 적절하게 집어낸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2013년 새로운 정부의 통일정책은 이같은 구조적 상황 및 과거 정권의 교훈을 고려해볼 때,

1) 지난 2013년 1월 2일 KBS 뉴스에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 그 중 남북관계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여론이 68.9%,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28%였다. 박근혜 후보가 51.6%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는데 68.9%의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부터 하라”는 주문을 했다. 이는 70%의 국민이 새 정부가 임기 초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걸어 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의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핵문제의 전망’ 기초연설문 중에서. (2012. 2. 28.)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에서 표현한 것으로 당시는 북의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시점이었다.

보다 효율적인 대안의 모색과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본다.<sup>3)</sup>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여전히 자국의 이익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기에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풀어가야 할 외교정책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본고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기대에 의해 본고는 구상되었다. 본고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정책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평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통일정책이 현실적 타당성과 신학적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연구하는 비평적 차원의 연구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들이 이행했던 통일정책들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현실적 타당성과 신학적 적합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에는 기독교 윤리학의 입장, 특히 공공신학의 측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신학적 제안을 하려고 한다.

## II. 공공신학 이해<sup>4)</sup>

박근혜 정부가 통일정책의 철학으로 삼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결국

3) 조한범, <신정부 대북정책 수립의 고려사항>,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3」(서울: 통일연구원, 2013. 1. 17)

4) 이 부분은 줄고 이동춘,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교회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104-144. 을 전반적으로 인용하였음. 본고에서 제시하는 공공신학은 대표적인 공공신학자인 Max Stackhouse의 입장을 따른다. 우선 공공신학의 태생에 대한 변명부터 하자면, 공공신학은 창조된 신학이 아니라 신학의 전통 하에 발전된 신학이다. 그래서 공공신학은 기존의 신학과 연계되어있고 대화가 되는 신학이다. 그러나 기존의 신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발견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제안된 신학이 공공신학이다. 기존의 신학의 한계라 함은 시대와의 소통에 대해 서이다. 즉 신학은 사적인 것을 넘어 공적인 것으로 세상과 시대와 소통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신학이 이러한 부분에 일정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시대와 단절이 아닌 소통을 이끌어 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신뢰를 전제로 한 대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남북문제의 해결은 남북당사자간의 문제이지만 주변국의 협조 또한 중요함을 인정하는 통일철학으로 보인다. 이에 기독교윤리학은 다양한 신학적 접근 중에 공공신학의 접근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철학에 신학적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공신학 이해를 우선 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신학의 한국적 응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공공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본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신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보다 ‘사적 존재(Private Being)’가 아니라 ‘공적 존재(Public Being)’라고 정의하는 데서부터 공공신학은 시작한다.<sup>5)</sup>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다.”<sup>6)</sup> 즉, 공적인 논쟁들을 신학 내뿐만 아니라 신학 밖의 모든 학문들과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하는 신학의 한 종류다. 이는

---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의 학문적 노력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윤리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공신학의 주장이다. 맥스 스택하우스, 심미경 역,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윤리』(서울: the pastor's house, 2005), 15.

5) 임성빈,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와 공공신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공공신학』(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25-26. 이상원, 〈공공신학의 핵심으로서의 사회정의에 대한 성경적 근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공공신학』(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71. 분명한 것은 ‘공공’(public)이라는 한정어는 ‘사적’(private)이라는 말과 대비되지만 공공성의 실질적 의미는 세상 현실과의 참여적 관계성, 공동체적 사회윤리의식, 역사 현실의 이상들에 대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변증법적 긴장과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다.

6) Max L. Stackhouse, 심미경 역,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 윤리』, 15.

공공신학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고민 하는 중에 제안된 신학이기 때문이다. 스택하우스가 공공신학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다. 예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새롭고 더욱 광범위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강하게 저항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공동의 삶에 관하여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체계적이고 에큐메니칼하며<sup>7)</sup> 보편적인 접근방식을 찾아야 한다.<sup>8)</sup>

주지하다시피, 세계화는 세계 곳곳에서 거침없이 드러나는 다양함을 하나 혹은 최소한으로 보편화시키려는 사회적 과정이다. 또한 역으로 사회적, 문화적 제도에 대한 지리학적 구속력이 약해짐으로 다양함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회적 과정이다.<sup>9)</sup> 이렇게 완성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세계화이기에 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고, 불안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신학은 세계화를 불안의 관점으로 읽지 않는다. 세계화는 인류 문명에 전지구적으로 합의된 도덕적 문명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sup>10)</sup> 표출된 의견은 다양하기에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충돌

7)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의 에큐메니칼성을 설명하면서 이것의 중요 과제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롭게 도래하는 글로벌 문명을 해석하고 안내하기 위해 근현대적 발전들 속에 내재된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혁하려는 것이라 보았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신학은 신학과 다른 학문 사이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로 규명했던 것을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Max L. Stackhouse,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서울: 북코리아, 2008), 33-34.

8) 앞의 책, p.14.

9) Malcolm Waters, 이기철 역, 「세계화란 무엇인가」(서울: 현대미술사, 1998), 13-15.

을 붕괴가 아니라 발전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대화이다. 대화를 통해 바른 타협 혹은 바른 협상이 이루어져 다양함의 일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화가 될 수 있는바, 이 역할을 공공신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세계화된 세상에서 교회와 신학은 사회참여자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판적 대화를 주선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대화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신학의 입장이다. 더욱이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대화기피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이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는 공공신학의 이러한 이해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북한을 파트너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파트너로 두고 있는 남한이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 III.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박근혜 정부는 금번 통일정책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1년 전부터 이미 발표된 내용이었다. 2012년 2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여 발제를 하는 중에 자신의 통일정책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칭하였다.<sup>11)</sup>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표현의 가감과 변경이 있긴 했지만

10) Max L. Stackhouse, edited by, *God and Globalization(Volume 1): Religion and the Powers of the Common Life*, 9.

11) 이 연설문의 기초는 그가 이 연설을 하기 1년 전 <Foreign Affairs>에 발표한 것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Geun-hye Park,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90,5, Sep/Oct 2011.

만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해하고자 한다.<sup>12)</sup>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의 악순환을 신뢰의 선순환으로 변환시키는 대장정”이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길잡이’ 역할”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신뢰프로세스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즉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기존의 약속들인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 등에서 했던 약속들을 서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sup>13)</sup> 둘째,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식량지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성의있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sup>14)</sup> 셋째,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남북 양자뿐 아니라 미-일-중-러 등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형태로도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남북한 모두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5)</sup>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여내 국가들과 돈독히 신뢰를 쌓을 때 가능한 프로세스<sup>16)</sup>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한반도

12) 물론 기조연설 이후 대선공약과정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반응에서,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달라지거나 더 강조되거나 빠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기조연설문에 아직은 머물러 있다.

13)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의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핵 문제의 전망’ 기조연설문.

14) 앞의 글.

15) 앞의 글.

16) 박근혜 정부가 통일정책을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헬싱키 프로세스’

신뢰프로세스”가 추진되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를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서”<sup>17)</sup>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sup>18)</sup>이 만들어지길 소원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핵문제의 전망’ 기초연설”과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일정책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남북한 간의 신뢰 쌓기 과정으로 제시된 통일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의 협조와 협력 하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를 모델링한 것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 채택을 기점으로 1989년 베를린 장벽 해체, 1991년 소련 해체에 이르는 공산권 붕괴 과정을 의미한다. 헬싱키 의정서에는 미국, 소련, 서독, 동독 등 동서 양 진영 35개국이 참여해 안보협력, 경제협력, 인권협력 등에 관한 10대 원칙이 담겼다. 헬싱키 체제는 소련이 1950년부터 거론해 오다가 1969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공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유럽 지역의 긴장은 완화됐고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17)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 기초연설문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핵문제의 전망> 중에서. (2012. 2. 28.)

18)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 IV. 남한 정부의 이전 통일정책들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비교

### 1. 이전 정부들의 통일정책<sup>19)</sup>

#### 1) 이승만-장면 정부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밝힌 첫 번째 공식적 입장은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1948. 12. 12) 후에 있었던 제1회 제헌국회 폐회식에서였다. 이 폐회식에서 남한 유엔과 협의하여 북한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100명 내외의 이북 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을 천명한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이었다.<sup>20)</sup> 즉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이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통일론이었던 것이다.<sup>21)</sup> 이렇게 한 것은 북이 도발한 6.25 전쟁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내세워 권위주의체제를 강화했고, 미국의 한국내정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때 북한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민주기치론(민족해방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론을 갖고 있었다.<sup>22)</sup>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통일관을 이어받았다. 즉 유엔 감시하의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따른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론이었다.<sup>23)</sup> 이러한 정책은 1960년 8월 27일 장면 총리의 시정연설, 1960년 9월 10일 정일

19) 이 부분은 줄고 이동춘,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교회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27-36.을 전반적으로 인용하였음.

20)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9」(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56. 사실 이 제안은 1954년 제네바 회의 때 변영태 대표가 주장한 것이다.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서울: 전예원, 2001), 155.

21)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 155.

22)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9」, 80.

23)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 155.

형 외무장관의 성명, 그리고 1960년 11월 2일 제5대 국회의 결의안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때 북한은 김일성 정권으로서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 2)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시작된 정부로서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공약에서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함께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력배양론’을 거쳐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지상명제를 조국통일이라고 하면서, 그 전제로서 조국 근대화를 강조하였고, ‘선건설(先建設) 후통일(後統一)’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접촉, 일·중 접촉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 출발점이 바로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구상 선언’이다. 이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과 병행하여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공식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통일의 세 가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였다. 7.4 남북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양측 최고당국자의 밀사가 만든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이 1973년 8월 남한의 ‘6.23 특별선언’<sup>24)</sup>을 이유로 남북조절

24) ‘6.23 특별선언’이라 함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년 뒤인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1974년 1월 18일에는 북한에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1974년 8월 15일에 제안한 것으로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의하였다. 이 원칙의 내용은 ①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② 남북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③ 총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수립 후 지속되어 온 ‘유엔 감시 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에서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기조를 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남한의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sup>25)</sup>

### 3)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전두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서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 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26)</sup> 특히 1987년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한 내용

---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 경주, ② 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한 간의 내정 불간섭, ③ 성실과 인내로 남북대화 계속, ④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⑤ 남북한 유엔 동시기입 불반대, ⑥ 모든 국가에의 문화개방, ⑦ 평화선련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25)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9」, 57-58.

26) 이 통일방안의 특징은 ① 평화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민주자유북지를 목표로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분단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③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그 과정에서 민족화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남북한 총선거의 규범으로

을 규정하였다.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헌법에 통일 관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이 관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 실천과제임을 확인하였다.<sup>27)</sup> 이때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다.<sup>28)</sup>

1988년 2월 25일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sup>29)</sup> ‘7.7 선언’은 북한을 대결 상대가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 이 방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 상으로는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는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

---

서 남북한 대표가 협의하여 제정하게 될 통일헌법 및 이 헌법에 따라 통일 민주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27)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9」, 58.

28) 앞의 책, 80.

29) 이 통일방안은 이흥구 통일원 장관이 구상한 ‘남북한체제연합론’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 157.

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을 거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0)</sup> 1991년 12월 13일에는 NCKK의 88선언의 영향력에 의해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때 북한은 김일성 정권으로 1991년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시하였다.<sup>31)</sup>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노태우 정부가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남북 사이의 체제경쟁도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에 따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및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남 혁명 전략의 포기 와 개혁·개방을 촉구하였다.<sup>32)</sup>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한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족공동체 통합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족공동체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

30)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9」, 58-59.

31) 앞의 책, 80.

32) 앞의 책, 80.

다. 민족공동체 개념은 통일을 특정 집단 또는 계급의 문제로 보거나,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연방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접근방식이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할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함으로써 과거 통일방안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sup>33)</sup> 이때 김정일 정권은 민족대단결론을 주장하였다.<sup>34)</sup>

#### 4) 김대중-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민간차원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부수준에서는 상호주의를 견지하고,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포용하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소위 ‘햇볕정책’이었다.<sup>35)</sup> 이렇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특수 관계를 갖고 공존공영하며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통일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00년 6월 남북한의 두 정상은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이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 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이다.<sup>36)</sup>

33) 앞의 책, 59-60.

34) 앞의 책, 80.

35)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 159.

36) 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합의이행 차원에서 분야별 남북회담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교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에 제기된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인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안보환경은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미국 국내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바뀐 상황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제기된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sup>37)</sup> 이때부터 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민족공조론’을 주장하고 있다.<sup>38)</sup>

북한의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인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초 아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제도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노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2.13 합의’ 이행과의 조화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이루어졌다. 남북은 이 선언을 통해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

---

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7)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9」, 61-62.

38) 앞의 책, 80.

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도 남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추진된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에 미흡한 것이었다.<sup>39)</sup>

### 5)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sup>40)</sup>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은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제시하였다.<sup>41)</sup>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는 평화공동체 창출, 경제공동체 형성, 행복공동체 실현에 두면서 이를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sup>42)</sup> 이 구상은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대 프로젝트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린다면, 남한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39) 앞의 책, 62.

40)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1989년 9월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994년 이를 재확인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있다.

41)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42)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4가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원칙에는 철저히되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 합의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앞의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9』, 65-69.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는 구상이었다.

| 구분<br>년도  | 남한 역대정부 통일정책      |  |
|-----------|-------------------|--|
| 1948-1960 | 제1공화국<br>(이승만 정부) |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
| 1960년대    | 제2공화국<br>(장면 정부)  | 남북자유총선거론(유엔 감시 하)                                    |
|           | 제3공화국<br>(박정희 정부) | 선 건설 후 통일론(1964)                                     |
| 1970년대    | 제4공화국<br>(박정희 정부) |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 6. 23)<br>선 평화 후 통일                 |
| 1980년대    | 제5공화국<br>(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br>통일민주방안(1982)                                 |
| 1990년대    | 제6공화국<br>(노태우 정부)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
|           | 문민정부<br>(김영삼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br>(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1994)                |
| 2000년대    | 국민의정부<br>(김대중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하며,<br>공존공영하며 협력하는 햇볕정책(1998)           |
|           | 참여정부<br>(노무현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br>(2003)                |
|           | 이명박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하며, 비핵·개방·3000<br>구상(2008) / 상생공영의 남북정책 |
| 2010년대    | 박근혜 정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2013)                                     |

## 2. 이전 정부들의 통일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비교

### 1) 차이와 발전 여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통일정책임

을 말한 것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파트너십을 인정했으므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10·4선언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10·4 선언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합의된 6·15선언 모두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전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서 2012년 11월 5일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정책에서 ‘NLL 수호’를 재차 강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등 보수적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국가안보실 부활’, ‘남북정상 회담 추진’,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말함으로 대결 위주의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과는 전반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 ‘글로벌 핵안보체제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핵문제의 전망’ 기조연설에서 발표했던 “남북의 신뢰가 진전되면 개성공업지구 같은 협력사례를 확산하는 등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교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협력 사업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일을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 또한 이전 정부들의 통일정책 방향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안이다. 전두환 정부가 통일을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이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는 ‘남북 평화프로세스’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시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것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이런 신뢰의 축적과정을 통해 비핵화가 진전되면 ‘비전 코리아

43)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서 2012년 11월 5일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즉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강비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sup>44)</sup>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 계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통일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눈에 띄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억지력과 함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북핵 폐기 문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sup>45)</sup>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다.....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sup>46)</sup>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면을

---

정책에서 발표했다.

44) 앞의 글

45)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핵 문제의 전망’ 기조연설문 중에서.

46)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서 2012년 11월 5일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정책 중에서.

보이면서도, 이전 정부들이 실패했던 보수적 면을 여전히 갖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철학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 2) 실현 가능성 여부

박근혜 정부의 신뢰와 균형에 초점을 맞춘 통일정책의 방향은 바른 설정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 대북 과제를 ‘분단의 평화적 관리-남북대화 분위기 조성-한반도비핵화방안’이라는 연결고리로 이해하는 것도 바른 판단이라 본다.

그런데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서 대북 억제력 및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남북대화의 분위기 조성으로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이산가족상봉 추진을 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한반도비핵화 방안을 제안한 것은 이미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행한 바 있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 제안이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북한이 최종단계에서 이를 거부하고 1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향후 5년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sup>47)</sup> 즉 비핵화(플루토늄 원자로 관련시설 및 우라늄농축시설)냐, 반확산(플루토늄 원자로 관련시설)이나, 비확산(수평적, 수직적)이나, 이들 중 하나를 정해<sup>48)</sup> 신뢰와 균형 정책을 진행해

47) 조성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과 남북경협>, 21세기통일경제연구원 「개원 1주년 포럼」, 2013. 2. 28.

48) “비핵화에는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부시 방식의 CVID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임. 비확산에는 수평적 비확산과 수직적 비확산

가야 이상에 머물지 않는 결실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북한이 기존합의들을 지키도록 한·중·일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UN, 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이 금년부터 2년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적절히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이해는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남북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킨다고 밝히고,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관계의 현안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말로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는 금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과제는 어떻게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발전을 내세웠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중국 동북3성과 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중 3각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

---

이 있는데, 수평적 비확산은 동결 있는 비확산이고 수직적 비확산은 동결 없는 즉 비핵화 없는 비확산임. '반확산'은 COVID의 무력적 형태임. 해상 차단을 하거나, 북한에 대한 무력 압박, 심지어는 예방적 공격이라든지 선제공격이라든지 등의 방식이 될 것임." 이정철, 〈북한 핵실험 정국 타개를 위한 대안과 쟁점〉, 평화재단, 『평화재단 제59차 전문가포럼』, 2013. 3. 19.

고 공약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동서진영의 군사적 긴장을 낮춰 동서독 통일을 이룩했던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문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적으로 선도/주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제공조는 가능하지만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주변국 모두에게 현실적 이익이 된다는 믿음을 심어 준다면 주변국의 협조는 충분한 가능성이라고 본다. 이는 트롤프 마파엘의 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sup>49)</sup>

독일 통일을 견인한 동방정책이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 유럽안보회의라는 다자 틀에서의 동서독 위치 강화, 동서독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독일 통일의 결정적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신뢰야말로 독일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서독은 국경을 접한 프랑스·폴란드뿐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인 미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시했다.....그런 신뢰를 몇 십년에 걸쳐 쌓았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다른 나라의 위협이 아닌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다..... 남북한이 대화를 시도하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중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및 주변국과의 신뢰프로세스 필요하다.

49) 트롤프 마파엘, <독일 통일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 ‘통일대비 의원연구모임’ & ‘통일미래포럼’ 초청 세미나, 2013. 2. 27.

## V.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 1.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는 ‘신뢰’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프로세스는 신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기독교에 있어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는 ‘신뢰’라는 말에 친근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기에 ‘프로세스(과정)’라는 말에도 친근감을 갖게 된다. 먼저 신뢰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신뢰’를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설명한다.<sup>50)</sup> 그의 이해는 전형적인 trust적 이해로 상호간의 협동적 믿음을 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설명하는 신뢰는 trust가 아닌 credit이라 보여 진다.<sup>51)</sup> 왜냐하면 trust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조건으로 신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credit은 앞으로의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신뢰하는 것을 말함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를 credit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credit으로서의 신뢰를 기본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과거지향적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고 오늘과 내일의 모습에 기대를 거신다고

50)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구승희 역, 「트러스트·사회도덕과 변영의 창조(Trust)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49.

51) 본고에서 trust와 credit을 이해하는 것은 윤여상의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차용했다. 윤여상, 〈어떤 ‘신뢰’, 어떤 ‘프로세스’여야 하는가〉, 평화재단 「평화재단 제59차 전문가 포럼」, 2013. 3. 19.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신뢰를 credit으로 이해하고 제시한 통일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남북관계에서의 신뢰는 평화정착을 위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축적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통일정책을 제안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집단이 다면적이기 때문이다.<sup>52)</sup> 즉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라는 최소한 세 가지 정책 수용집단(target audience of policy implementation)이 있기에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sup>53)</sup> 또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과 파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의 제도적 완결을 높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한이 신뢰가 있어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정책구상이다. 그러므로 과정으로서의 신뢰를 선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時宜的)인 이해라고 보기에 '신뢰프로세스'라는 용어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선택이다. 이것을 성화과정(聖化過程)이라는 신학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독교 윤리학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다.

## 2.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북한의 행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반응 및 대응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압박 일변도였던 이명박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3의 정책으로 평가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정전협정백지화 선언 등의 분위기에 위기를 맞고 있다.<sup>54)</sup>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항의와 김정은 체제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52) 앞의 글.

53) 앞의 글.

54) 양무진,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 (헤럴드 포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2000091&md=20130322105509\\_AO](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2000091&md=20130322105509_AO)

위해서 시작된 북한의 연출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안 2094호’가 채택됨으로 인해 위기의 분위기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점증되는 데도 원칙에 따라 통일정책을 전개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반응은 지난 3월 11일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류길재 장관의 취임사<sup>55)</sup>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류 장관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작금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는, 듣기조차 민망한 협박 언사는 우리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정부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안보적 도발은 또한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sup>56)</sup>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sup>57)</sup>라며 다음의 말을 이어 갔다.

남북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든, 교류든, 협력이든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신뢰는

55) 류길재, “통일부장관 취임사”, 통일부, 2013. 3. 11. <http://www.unikorea.go.kr>

56) 앞의 글.

57) 앞의 글.

서로가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이 과거에 합의한 약속은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남북간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 이행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이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sup>58)</sup>

류장관의 취임사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라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푼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늘 근본적인 문제였던 북한이 신뢰를 보여야 남한에서도 신뢰를 보이겠다는 한계가 류장관의 취임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Give & Take’ 식의 태도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보수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우려스러운 태도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 그리고 류장관의 취임사에서 일률적으로 밝히고 있는 신뢰는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쌍방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신뢰를 평가할 것이냐는 평가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남한은 북핵 무조건 폐기가 신뢰를 쌓는 우선순위라고 보는 반면, 북한은 핵을 외부로부터의 체제전복위협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핵을 개발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핵폐기가 신뢰를 쌓는 우선순위 아니라 민족끼리의 자주적·주체적 통일논의가 신뢰를 쌓는 우선순

58) 앞의 글.

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한 이견(異見)을 좁히기는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까지 남북간 통일논의에 걸림돌이었다면 남북간에 무엇으로 신뢰를 평가할 것이냐는 '신뢰평가기준'을 선정하는 것에 우선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축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남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공황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좀 더 가진 자가 좀 덜 가진 자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명확히 볼 수 있는바 사랑은 공황로 재정리된다. 공황은 내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따른 북한의 행보에 대해 보인 이해는 재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신뢰 이해가 아닌 남북한 쌍방이 합의된 신뢰 이해가 되어야 하고, 남한의 입장이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공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 VI.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발전적 제안하기

이승만 정부 이후 지금까지 각 정부, 통일시민단체, 교회가 보여준 통일에 대한 태도는 분열에서 통합, 분단에서 통일, 균열에서 일치, 분리에서 에큐메니즘으로 점진적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념적 차이에 따라 갈등이 있었고 또한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지만, 분단 직후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보던 태도가 민족적·인도적 태도로 발전

하고 있음은 긍정적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념을 넘어 현실적인 공존을 도모한다는 입장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통일정책이 완전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정책이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환영하는 것은 분단 직후 보이던 레드 콤플렉스에서 민족적 공생·공존이라는 입장으로 통일논의가 발전되었다는 점을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입장은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들의 통일정책을 보완하고 계승한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의 문제는 여전히 상황적이므로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통일정책이 이전 보다 발전적인 것이라 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존하는 남북갈등, 남남갈등,<sup>59)</sup>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및 긴장 등 산적한 숙제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숙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신학을 제안한다.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신뢰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이를 통한 공공선 축적을 신학의 책무로 보는 공공신학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안내해줄 수 있다고 본다.

59)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갈등은 남남갈등으로 이념적 성향 차이에 따른 갈등이다. 이것은 정부에 따라, 시민단체에 따라, 신앙노선에 따라 제각기의 이념을 갖고 있음에 따른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보다 발전적인 통일단계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 문제를 다룬 많은 논문 중 최근 한국기독교윤리학회에서 발표된 고재길 교수의 논문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통일문제와 기독교-남남갈등과 그 해법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위기의 시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평화 모색」,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17집, Oct. 2012.

## 1. 에큐메니칼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받아들여라

이 시대의 특징은 선호의 다양함, 이기적 이익추구, 정체성의 급변에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가 지닌 특징이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사회에서, 특히 시민사회가 된 공동체에서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은 대화와 토론이다.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는 스택하우스는 대화와 토론만이 세계화된 시대에 살 길이라고 강조한다. “공공신학은 인류를 그 대중으로 간주하며, 적을 대화와 토론의 동반자로 생각한다. 이 대화 공동체는 인류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논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다.”<sup>60)</sup>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공신학으로 안내하자면, 북한에 대해 적이 아닌 ‘토론의 동반자’요 ‘대화공동체’로 인정하고, 이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발전적 과정으로 본다면, 남북 및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공개적 담론의 장(場)에서 공개하고, 논의를 공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sup>61)</sup>

60) 스택하우스, 「대중신학과 정치경제학 : 현대사회에 있어서 크리스찬 청지기」, 136-137. 다른 말로, 공공신학은 신학이 세상과의 대화를 통해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선을 창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되고 다원화된 세상에 대해 교회와 신학이 감당해야할 역할은 공동선에 입각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에토스를 형성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교회와 신학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이들을 청지기로 파송시키는 일이다. 공공신학은 이를 소명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스택하우스는 소명과 청지기라는 신학적 개념을 공동선이란 일반 도덕적 용어로 새롭게 진술한다. 그는 공동선이란,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선”이기에 공동선은 사회 전체 공동체의 행복과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Max Stackhouse, *Theolog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for Business Decision-Making*, 258. Political Economy, xiii.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이타적 공동선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61) 국민적 열망은 ‘통일네트워크의 대중화’를 바란다. ‘통일네트워크의 대중화’라는 것은 통일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국민, 대중,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미 세계화의 흐름 속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졌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995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9953.html)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 내에서 보수와 진보는 모든 면에 각자의 일방적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이러한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입장표명은 남남갈등을 양산시키고, 갈수록 통일과는 거리가 먼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다문화다종교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펼치는 주장이나 이론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통일논의에 있어 현실적 난제는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불신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각자의 위치나 입장에 집착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말이 모순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갈등보다는 남남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선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더 설득적일 것이다.<sup>62)</sup> 물론 본고가 제안하는 대화는 적당한 선에서의 융합이나 절충을 하지는 대화가 아니다.<sup>63)</sup> 공공신학이 이해하는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바른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이로 말미암아 서로의 전통을 통해 배우고 자기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다.<sup>64)</sup>

62)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273-274.

63) 존 캅(John Cobb)은 기독교가 타종교에 대해 박해한 것에서부터 타종교와 대화한 것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보여준 전통적인 입장과 최근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이제는 기독교가 타종교와의 대화를 넘어서 상호변혁과 모든 종교에 대한 수렴을 시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John B. Cobb, Jr., *Beyond Dialogue : Toward a Mutual Transformation of Christianity and Buddhism*(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2), 47-52. 그러나 캅의 이러한 주장은 종교다원주의와 다르지 않다. 공공신학이 말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다종교 상황에서 신학의 역할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64) 이런 의미에서 판넨베르그(Wolfhart Pannenberg)의 자기 정체성에 기인한 타종교로부터의 배움이라는 자세는 캅과 비교할 때 본 논문이 지닌 입장과 같다. 즉 기독교의 우수성은 타종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필요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Wolfhart Pannenberg, *Toward a Theology of the History of Religions in Basic Question in Theology*, Vol.2, trans. George H. Kehm,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1), 92-96. 이는 공공신학이 자기 정체성을 지닌 채 타종교타문화와 공동의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의를 적극 지지하는 신학이지

그러므로 남북 간의 문제는 은밀하게 다루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루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본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애로와 고충을 포함해)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국민은 이를 심사숙고하는 작업과정을 통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것이 공공신학이 강조하는 문제해결의 공론화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를 통해 공동선을 이루어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으로 ‘비핵개방3000’의 입장을 정하고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킴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갈수록 악화됐고, 국민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중도 진영으로 구분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 연대’(이하 평통연)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려했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로 치달는 것을 막게 되었다. 바로 이런 예가 공공신학이 주장하는 것이다.<sup>65)</sup>

이러한 성명서는 정부의 방침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 하지만, 실은 시민 사회의 특징으로서 시민들의 공론화 작업이다. 보기에 따라 이러한 모습은 비판적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미’로서의 통일로 가자는 낙관적 태도이다. 물론 보수 진영의 입장은 중도 진영의 이러한 입장과는 대립이 되므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대립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각도 변증법적으로 이해하자면, 비판적 낙관주의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로서 통일

---

만, 결코 이기적인 고집과 편견이 아닌 열린 태도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지향하는 바에 있다.

65) 평통연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려하며 2009년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정국을 ‘비상상태’로 규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동시에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강행해, 정치적 위기에 이어 전쟁 위기에 처했다며 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의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논의 및 토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통일논의를 할 때, 이를 정부가 주도하느냐, 정부와 시민단체 혹은 국민이 협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정부가 독점적으로 주도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고, 국민과 함께 풀어갔을 때는 실보다 득이 많다. 대북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국민적 합의였음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이 하나의 교훈이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우리국민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한 여타 국정과제 평균지지도 보다 20% 상회하는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남남갈등이었다.<sup>66)</sup> 그러므로 정부가 주도하되 독점이 아닌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논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 통일과정을 얻게 될 수 있다.<sup>67)</sup>

또한 같은 맥락이고 비슷한 방법이지만, 거버넌스적 개념도 공론화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에큐메니칼의 입장에 있는 공공신학은 다양성과 복잡성 및 유동성이 커지는 시대에는 추상적인 이념에 기초한 이론이나 일방적 논의보다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기초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근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에 동의한다.<sup>68)</sup> 냉전의

66) 경남대 북한대학원/ 경실련통일협회/한국NGO학회 주최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재론: 남북화해와 남남합의를 위하여』, 2002. 11. 5-6.

67) 이러한 합의과정은 자기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답을 얻기 위한 계속적인 상대적 작업이다. 강태규, 〈대북정책의 패러독스〉, 미네르바 정치연구회 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서울: 인간사랑, 2005), 487.

68) 거버넌스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의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고 공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유재원, 소순창,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2005.

종식과 더불어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진진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조건 및 경로가 변화된 상황에서<sup>69)</sup>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장의 확대, 다원주의와 정보화 사회, 세계화와 지역주의 등으로 국가의 통치능력은 점점 감소하고 그 독점력도 약화되는 환경의 변화는 거버넌스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했다. 즉 정부가 독자적이거나 독선적으로 국가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고 네트워크를 통한 통치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sup>70)</sup> 공공신학이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참여를 말하는 것처럼, 거버넌스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말한다. 거버넌스가 시민사회, 시민참여를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정부의 약화와 시민의 민주적 책임성의 약화에 대해 염려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보수주의적 기우라고 본다. 이영철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sup>71)</sup>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만이 아닌 정부 이외의 조직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시민의 역할, 참여, 민주적 통제, 민주적 책임성 등 중요한 쟁점이 곁길에 빠져 묻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현대의 민주주의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시민이 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오래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신학이 시민들과의 토의와 합의를 통해 공동선을 찾아내거나

서창록,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에서 재인용.

69) 서창록,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황병덕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6), 5.

70) 서창록이 정리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본고가 주장하는 바로 차용하자면, ‘정부, 시민단체, 교회가 동일이라는 한민족의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창록,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9.

71) 이영철, 〈거버넌스와 곁길로 빠진 민주적 책임성〉, 215-216.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듯, 거버넌스는 시민의 토의와 합의를 통한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정부, 시민단체, 교회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참여도를 높이고, 연결성을 강화하면 통일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기에 거버넌스의 개념은 공공신학의 입장과 융합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대북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남남 간의 갈등은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신학이 제시하는 방법론인 공론의 장에서 벌이는 에큐메니칼적 토의와 숙고의 과정 또는 거버넌스와 융합된 토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칠 때, 합의에 의한 보다 발전된 통일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72)</sup> “한반도 신뢰프로젝트”는 대화가 기본이 되고, 이것이 프로세스임을 인정하는 것에 있기에 지금 설명한 해법을 활용함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발전과정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 2. ‘신뢰는 쌓여진 대화만큼 쌓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분단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통일정책과 통일해법을 논의했지만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의 염원은 여전히 하고, 과정으로서의 성과는 있다. 그것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본다. 물론 니버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 현실을 감안하면 통일은 불가능한 이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모두의 염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염원은 현실을 이기는 힘을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완전한 것이란 없다’는 이해 하에 통일문제를 과정으로 이해

72) 물론 공공신학은 공동선에 입각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론도 절대적이 아닌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의 의견이나 이론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잠정적인 결론수준에 위치시킨다. 이렇게 함으로 대부분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하고 풀어간다면, 근사적 접근은 최선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sup>73)</sup> 근사적 접근이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로 통일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이 경제적 우월감을 보이는 것이 각자에게 최대의 장애물일 수 있다. 각각의 관점과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 통일논의는 진전보다는 퇴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대칭의 개념이 아닌 비대칭의 개념으로 서로를 본다면 통일논의는 충분히 진전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주도하에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입장을 취할 때, 남한은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sup>74)</sup> 이렇게 하여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국제사회의 군사적 긴장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관용의 자세로서의 남북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축적될 때 신뢰는 그만큼 축적되고 강화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가 말하는 대화는 대화 그 자체가 아니고 대화를 통해 약속되거나 협상된 것을 지키는 대화를 말한다. 예컨대, 상대의 불이행을 추궁하더라도 제2개성공단, 제3개성공단 개설 약속에 대해서는 스케줄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신뢰를 축적하고 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73) 우리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니버는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 현실과 이상을 “둘다”(both/and)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Harry R. Davis and Robert C. Good, Ed. by.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335.

74)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통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남북관계 또한 이제 개별 국가의 독자적이고 국지적인 해결능력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 국가 간 역내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정치의 시대적 흐름이 협력 지향적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기도 하다.

윤여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천 전략으로서 ‘대북지원 사전 예고제(대북지원 카렌다)’와 ‘남북관계 개선 단계별 카렌다’라는 안을 제안했다.

남북간의 크레딧 축적과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인도적 지원 정량 전 예고제(대북지원 카렌다)’를 제도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2년을 주기로 쌀(비료)과 의료 및 보건 등 지원 품목과 수량 및 시기를 사전 예고하고 집행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대한 유인요인을 제공하면서도 특정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재개된 시점에 지원 카렌다에 명시된 항목을 자동으로 지원함으로써 재논의 과정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즉시 재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 당국은 대북지원과 관계된 협력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각 시기별로 책정된 지원내용이 그 시기가 경과될 경우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sup>75)</sup>

이러한 윤여상의 제안은 아직은 추상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적 단계로 가게 하는 제안으로 보인다. 본고가 주장하는 행동하는 대화, 행동으로서의 대화와 일맥상통하는 제안이라 본다.

그러나 행동하는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신뢰가 축적되려면 남북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북한과 연관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의 열쇠를 남한과 북한만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대화와 논의도 남북간 대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이전시절부터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헬싱키 프로

75) 윤여상, <어떤 ‘신뢰’, 어떤 ‘프로세스’여야 하는가>, 평화재단, 「평화재단 제59차 전문가 포럼」, 2013. 3. 19.

세스”를 모델로 삼아 “신뢰프로세스”를 개발한 것이다.<sup>76)</sup>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국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정인의 안내가 도움이 된다.<sup>77)</sup>

헬싱키 협약의 10개 원칙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주권 존중, 무력 불사용, 영토주권의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그리고 국제법 준수 원칙 등에 더 큰 비중이 주어졌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당시 소련과 동유럽이 느끼는 인권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해 조심스런 접근을 했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포함함으로써 인권 원칙과의 균형을 잡았던 것이다..... 우선 북의 주권과 영토, 무력 불사용, 내정 불간섭 원칙 등을 양자 또는 다자 형식으로 보장해 북한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건 없는 경제·과학기술·환경·사회 문화적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북의 자발적 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북의 내부적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압력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같은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실효성이 적을 뿐 아

76)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동북아에서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 가능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서울이 그러한 노력의 발원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blog.daum.net/polinews\\_people/1254](http://blog.daum.net/polinews_people/1254)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방향설정에 대해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 3월 2일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자들은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0418322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04183223)  
2013년 3월 29일, 조선일보 주최로 ‘아시아의 새로운 과제 : 착한 성장, 똑똑한 복지’를 주제를 갖고 열린 제4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도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아시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다. <http://kor.theasian.asia/archives/74844> 이러한 것들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증거들이다.

77) 문정인, “북한 인권과 헬싱키 프로세스”, 한계레인터넛신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0167.html>

나라 체제전환의 흡수통일론으로 공격을 받음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 공존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sup>78)</sup>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했다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한일관계, 더 나아가 미중관계까지도 신경을 쓰고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모두 쉽지 않은 관계들이다. 더욱이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행된 유럽의 정서와는 다른 정서가 아시아 정서이기 때문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더라도 한국적·아시아적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은 중국을 예로 들어 볼 수 있겠다. 중국은 현재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independent and peaceful unificat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남한체제 중심의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 등 외부국가들이 배제된 남북한 당사자들만의 협의 하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미국을 배제하고 통일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친미적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통일한국이 중국과의 영토, 역사문제에 있어 갈등이 생길 것에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커지고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수록 통일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국은 통일한국이 반중국적이지 않다는 점을 중국에게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 현실이 있음에도 통일의 가능성은 늘 있다는 믿음

78) 북한이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없이 여전히 강경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 신뢰프로젝트’에 호감을 보이는 듯하다. 2013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이 신년사를 통해 6.15선언과 10.4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물론 일부에선 2013년 신년사는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놓은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대화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우리 신앙에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sup>79)</sup> 그러므로 다양한 대화를 통한 신뢰축적, 축적된 대화를 통해 축적되는 신뢰를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진전되리라는 믿음을 공공신학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 VI. 나가는 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방향과 틀과 내용에 공을 들인 흔적이 있다. 지난 정부들의 통일방향과 내용을 보완 계승했다는 측면에서도 다수를 공감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핵 문제, 즉 북한의 비핵화, 핵개발포기가 선결조건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 이명박 정부 실패했던 선결조건과 같기에 북한이 사활을 걸고 지켜내려는 핵개발, 핵보유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최대 난제임에 틀림없다.<sup>80)</sup>

그러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모델링한 ‘헬싱키프로세스’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외교안보적으로 선도적 주도를 해야 할 것이다.<sup>81)</sup> 안성호의 제안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아세안이나 동북아지역이나 먼저 국제공조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 함께 남진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황금평, 백두산, 나진선봉 등 북중접경지역에 중국과 함께 북한투자에 참여한다. 이는 개성공단-

79) 임성빈, <통일을 향한 교회(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실천>, 한반도평화연구원 KPI 칼럼, 2009. 11. 18.

80) 박근혜대통령 취임식 날인 2월 25일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노동신문 2013. 2.25자와 러시아소리 2013.2.25자 참조.

81) 안성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과 남북경협>, 21세기통일경제연구원 「개원 1주년 포럼」, 2013년 2월 28일. <http://cafe.naver.com/globaldemocracy/12476>

철원지역-금강산 등의 북진정책과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sup>82)</sup>

그러나 이 모든 일/숙제는 남한이 풀어야 할 것들이다. 남북갈등, 남남갈등, 한일갈등, 북미갈등, 미중갈등 등 통일문제를 둘러싼 산적한 난제들을 푸는 건 결국 당사자인 남한의 몫이다. 결국 본고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남북통일문제는 긴 인내심과 에큐메니칼적 자세가 필수적이다. 물론 아직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통일정책이자 철학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런 긴 인내심과 에큐메니칼적 대화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대화다.<sup>83)</sup>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때론 전략적 대화뿐만 아니라 민족애를 담은 대화도 필요하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한·미·중 3자 대화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전략적 대화수단이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보다 글로벌 이슈 위주의 전략 대화를 개최하여 점차적으로 북한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sup>84)</sup>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충분한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85)</sup>

82) 앞의 글.

83) 박근혜 정부는 최근 북한과 대화하라는 국내외의 압박에 대해 김정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4월 7일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해, 위기라고 해 선무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틀 전인 4월 5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대화 제의보다는 북한이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신뢰를 줘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태도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http://media.daum.net/issue/410/newsview?issueId=410&newsId=20130407183006533>

84) 앞의 글.

85) 본고가 학회에 제출된 시간은 2013년 4월 7일, 학회에서 발표된 시간은 2013년 4월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남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의 노력이 문제 해결을 좌우한다면 교만한 말이 될까? 예수님의 섬김(serving)의 관점에서 볼 때, 섬김은 상대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수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정책/철학을 가지고 있는 바라면, 북한보다 큰 수고와 양보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이러한 태도가 통일의 난제들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할 것이다.

---

20일, 학회지에 원고를 보낸 시간은 2013년 6월 30일, 학회지발간에정일은 2013년 8월 31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한 시기와 원고가 책자로 나온 것은 약 5개월간의 시간차가 생겼다. 이로써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현상항에 대한 시의적절한 진단과 평가를 해야 하는 윤리적 작업에 있어 독자들은 당황해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본 원고가 책으로 나오기 전에 5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필자가 본 원고에서 주장했던 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기대한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점이 바른 예측이었음을 짧게나마 증면하려고 한다. 즉 개성공단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다. 그러나 7차 회담 끝에 개성공단 문제는 합의됐고, 보다 발전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는 곧 본 논문이 주장한 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

## 참고문헌

- 강태규. 『대북정책의 패러독스』. 미네르바 정치연구회 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서울: 인간사랑, 2005.
- 경남대 북한대학원/경실련통일협회/한국NGO학회.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재론: 남북화해와 남북합의를 위하여』. 2002. 11. 5-6.
- 고재길. 『한국사회의 통일문제와 기독교-남남갈등과 그 해법을 중심으로』. 『위기  
의 시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평화 모색』.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17집.  
oct. 2012.
-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 서울: 전예원, 2001.
- 서창록. 『한반도 평화·변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황병덕 외. 『한  
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이상원. 『공공신학의 핵심으로서의 사회정의에 대한 성경적 근거』. 기독교윤리실  
천운동 위음. 『공공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 이영철. 『거버넌스와 결길로 빠진 민주적 책임성』.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추계학  
술대회. 2009. 10. 9.
- 임성빈.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와 공공신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위음. 『공공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정성한. 『한국 기독교 통일 운동사』. 서울: 그리심, 2006.
-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9』.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 Cobb, John B. Jr., Beyond Dialogue : Toward a Mutual Transformation of  
Christianity and Buddhism.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2.
- Davis, Harry R. and Good, Robert C. Ed. by.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 Francis Fukuyama. 구승희 역. 『트러스트-사회도덕과 변영의 창조』. 서울: 한국 경  
제신문사, 1996.
- Geun-hye Park,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90,5, Sep/Oct 2011.

- Malcolm Waters. 이기철 역. 『세계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학사, 1998.
- Max L. Stackhouse.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Max Stackhouse. 심미경 역. 『지구화 · 시민사회 · 기독교윤리』. 서울: the pastor's house, 2005.
- Pannenberg, Wolfhart. “Toward a Theology of the History of Religions,” in Basic Question in Theology, Vol.2, trans. George H. Keh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 Stackhouse, Max L.,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Nashville: Abingdon, 1995.
- Stackhouse, Max L., edited by, God and Globalization(Volume 1): Religion and the Powers of the Common Life.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Continuum, 2000.
- Stackhouse, Max L., God and Globalization(Volume 4): Globalization and Grace.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Continuum, 2007.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 MI: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87.
- 김현욱, “신뢰프로세스와 ‘신뢰외교’,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의 외교적 선택”, 평화재단 제59차 전문가포럼, 2013. 3. 19.
- 류재길, “통일부장관 취임사”, 통일부, 2013. 3. 11.
- 박근혜,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학술회의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의 핵문제의 전망’ 기조연설문 중에서. (2012. 2. 28.)
- 박인휘, “갈등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도전”, 평화재단 제59차 전문가포럼, 2013. 3. 19.
- 조성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과 남북경협”, 21세기통일경제연구원 개원 1주년 포럼, 2013. 2. 28.
- 조한범, “신정부 대북정책 수립의 고려사항”, Online Series CO 13-0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1. 17)
- 주도홍. “한국교회의 통일관 무엇인가? - ‘88선언’과 ‘96선언’을 중심으로 -”, 한국기독교 통일포럼. 『통일한국 포럼』. 서울: 바울, 2006.

윤여상, “어떤 ‘신뢰’, 어떤 ‘프로세스’여야 하는가”, 평화재단 제59차 전문가포럼, 2013. 3. 19.

이정철, “북한 핵실험 정국 타개를 위한 대안과 쟁점”, 평화재단 제59차 전문가포럼, 2013. 3. 19.

임성빈, “통일을 향한 교회(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실천”, 한반도평화연구원 KPI 칼럼, 2009. 11. 18.

트론프 마파엘, “독일 통일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 ‘통일대비 의원연구모임’ & ‘통일미래 포럼’ 초청 세미나, 2013. 2. 27.

평화연구원. “현안진단 제68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0418322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04183223)

<http://kor.theasian.asia/archives/7484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995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9953.htm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2000091&md=20130322105509\\_AO](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22000091&md=20130322105509_AO)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0167.html>

<http://www.unikorea.go.kr>

<http://cafe.naver.com/globaldemocracy/1247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1895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1895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189561>

<http://media.daum.net/issue/410/newsview?issueId=410&news-id=20130407183006533>

논문투고일: 2013. 6. 30.

심사개시일: 2013. 7. 15.

게재확정일: 2013. 8. 12.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4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평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은 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현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다양한 사안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통일정책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평적 검토를 했다.

살펴보건데, 남북통일문제는 긴 인내심과 에큐메니칼적 대화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물론 아직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통일정책이자 철학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런 긴 인내심과 에큐메니칼적 대화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대화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때론 전략적 대화뿐만 아니라 민족애를 담은 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남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의 노력이 문제 해결을 좌우한다면 교만한 말이 될까? 예수님의 섬김(serving)의 관점에서 볼 때, 섬김은 상대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수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정책/철학을 가지고 있는 바라면, 북한보다 큰 수고와 양보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이러한 태도가 통일의 난제들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안보다 더 중요한 이상이 있다. 그것은 통일의 가능성은 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신앙에 있다는 사실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대화를 통한 신뢰축적, 축적된 대화를 통해 축적되는 신뢰를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진전되리라는 믿음을 공공신학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현실적 타당성과 신학적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들이 이행했던 통일정책들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현실적 타당성과 신학적 적합성을 살펴보

있고, 마지막에는 기독교 윤리학의 입장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신학적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통일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공신학, 에큐메니칼적 대화, 섬김

---